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대구 참여연대

공동대표/ 원유술김민남 주소/ 700-422 대구시 중구 동인2가 62-5번지 2층 전화 053)427-9780

전송/ 053)427-9723 홈페이지/ www.civilpower.org E-mail/ civilpower@hananet.net

문서번호 : 참여01-04-16-01

시행일자 : 2001년 4월 16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담당: 정책부장 강금수 018-504-5312)

제 목 : 대구시 자치단체들의 도시미관정비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비판성명

### 성명서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미관정비사업은 관주도의 행사대비용 사업으로 전형적 전시행정이다.
2.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3. 해당 자치단체들은 이같은 사업방식을 즉각 수정하고, 예산계획을 대폭 재검토해야 한다.
4.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혈세를 마구잡이로 투입하여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대륙간컵 축구대회 등의 국제행사를 앞둔 현재 대구시 및 각 구청에서는 도시미관정비의 명목으로 낭비성 예산 집행을 일삼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각종 대규모의 보도블럭 교체공사 추진 및 총예산 45억원의 야간조명공사 계획에 이어 최근에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도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중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억2천7백만원을 들여 시청주변 일대 업소의 옥외간판 등 광고물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성구청은 들안길 먹거리타운 일대에 4억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옥외광고물 교체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사업들은 관주도의 행사대비용 사업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전시행정의 전형임을 지적하며, 사업방식의 즉각적인 개선 및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1. 대구시의 시내버스 도색사업 예산낭비에 대하여

대구시는 현재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회사들이 보유한 운행한계년수 3~5년미만의 낡은 차량을 새로 도입된 천연가스 차량과 같은 색으로 도색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대당 70만원의 도색비용 중 시비가 80%(56만원)로 대구시의 보조금이 과도하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에어컨 등의 서비스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된 차량을 천연가스차량과 같은 색으로 도색함으로써 승객들이 양질의 버스를 이용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2. 중구청의 옥외광고물 교체사업에 대하여

중구청의 시청주변 옥외광고물 교체공사는 해당업소의 자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억2천7백만원 전액 구비로 집행되고 있다. 수성구청 또한 4억9천여만원의 소요비용 중 70%(업소부담 30%)를 국비 및 구비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시 소요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용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중구청의 경우 조례의 지원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며 수성구청의 계획 또한 비용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공사업체를 소개한다거나 저리의 용자를 알선하는 등의 간접적 지원 방식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비용의 전액 또는 과도한 액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와 같은 도시미관정비 사업은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일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밀히 재정비해야 한다.

도시미관을 정비하여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세밀한 법규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행사대비용으로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효과나 예산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가림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후차량 도색이나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평소의 행정지도나 명령을 통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자치단체들이 이를 방기하다가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혈세를 대거 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관련법규를 세밀하게 정비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4. 해당기관은 사업의 즉각적 중지 또는 예산집행계획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및 중구청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일지라도 시행방법과 예산지원규모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 수성구청 또한 사업 착수 이전에 예산집행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련시책이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비용지원을 하더라도 지원비율을 대폭 낮추거나 해당업체의 자발적 참여 및 간접적 지원 방법을 택하여 공공예산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01. 4. 16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장 소영진(직인생략)